

## 6.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 박 종 철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차별성을 지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북한의 대화거부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왔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한·미 공조를 중시해 온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시간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 돌이켜 보면 2000년 북·미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졌고, ‘북·미공동커뮤니케’가 발표되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예견되기도 하였다. 물론 상황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은 8년 전의 밀월기를 회상하고 이의 복원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문제, 북·미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북·미 양자회담을 중시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동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북·미관계가 급진전되어 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가 개설될 경우 이것은 남북관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관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해묵은 과제이다. 특히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조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기 클린턴 행정부 기간(1993~1996)에 미국의 개입확대정책과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를 이루었으나 2기 클린턴 행정부(1997~2000)기간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좋은 협조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조화되기 어려웠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병행 개선,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의 경색, 북·미관계 경색 및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국 및 북한에 대해서 입지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남북대화 재개의 고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을 고려할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국제식량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함께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대북 직접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통로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식·비공식의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 고위급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 기본합의사항의 이행방안, ‘비핵·개방·3000구상’의 실현방안, 대북지원과 인도주의문제 등 모든 현안을 망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중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의 원칙적 존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변화된 국내외 상황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은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10·4 정상선언’은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허심탄회하게 실천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9·19 공동성명’(2005.9)에서 비핵화와 연관되었고,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가칭)’을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종전선언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비핵화의 지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수면 밑으로 잠복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련성, 한반도 평화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안,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및 절차, 종전선언 문제의 해법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하루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